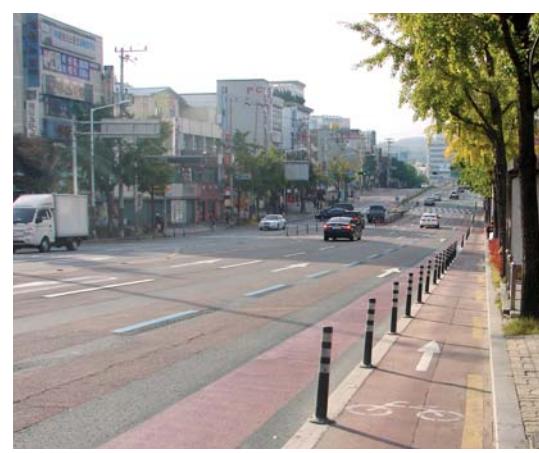


<5>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구시 남구 대명동 중앙대로. 대구시는 차도 2차선을 줄여 보도를 넓혀 청소년 문화거리로 조성할 방침이다. 주변 학교와 학원, 주민과 1년 이상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사람이 거닐어야 문화의 거리” 8차선을 6차선으로 좁힌 도시



대구시 서구 내동 차도 폭을 줄여 만든 자전거도로.



대구시 구도심에 자리한 근대역사관 전경.



1.5km 연장의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전경.

대구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선진적인 도시정책을 펼치고 있다. 근대문화유산을 철저히 보존하고 복원해 구도심을 꾸몄고,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설치해 승용차가 아닌 시내버스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좁은 보도가 아닌 차도를 줄여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고, ‘좁은 이’를 위해 보도의 폭도 넓히고 있다. 구도심인 중구에 시청이 있고, 그 주변에 선교사 사택, 쌍탑으로 유명한 계산동성당, 수녀원, 개성학교, 3·1운동 계단 등 역사문화 자원과 경상감영공원, 2·28기념중앙공원 등 공원이 몰려 있으며, 조선 후기부터 존재했던 한약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물론 이들을 연결하는 ‘진골목’은 이미 유명한 관광자원이 됐다.

물론 이들 사업이 단기간에, 최초 생각대로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애초 5.4km였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10년간 수많은 논의 속에 1.5km로 단축됐고, 대구의 근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근대역사관이 일제강점기 자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은 이제 막 다른 대도시들이 출발점에 서있는 것과는 달리 10년 이상 꾸준히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도시를 새롭게 조성하는데 중요한 서포터인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 연구원 등을 동네 곳곳에 상주시켜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동네를 되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성과 우선’ 원칙 아래 고작 1년, 길어야 3년의 시간이 주어지는 다른 대도시와는 다르다.

대구 역시 구도심은 쇠락할 수밖에 없었다. 주거지역, 거리 할 것 없이 주민과 걷는 이들은 줄어들었고 당연히 문닫는 상가도 늘어났다. 외곽 개발은 계속되고 아파트 숲 속에 갇힌 구도심에는 영세민과 노인들만이

보도 넓히고 자전거 도로 만들고

선교사 사택 등 근대 유산 복원

10년째 꾸준한 추진 구도심 활기

남아 노후하고 열악한 주택에서 연명하고 있었다.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주택 보급률은 102.1%로, 100%를 넘어섰으며,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에 뛰어들어 대규모 수익을 챙겼던 건설업체들은 더 이상 매력 없는 ‘구도심 살리기’에서 꿈나니를 감췄다. 대한토지주택공사나 지역 공기업마저도 수익성을 따지며 기존 전면철거 방식의 아파트 짓기에 참여를 거부하면서 결국 이들 구도심 재생에 행정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재개발·재건축에서 보듯 대량 공급·대규모 수익의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고층 아파트 건설은 불가능했다. 구도심에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는 자원과 개발 과정에서 사라졌던 것들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거리를 다듬어 사람이 다니게 하고, 주거지역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해 주민들 스스로 자신이 사는 공간을 바꿔나가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을 초 각 자치구에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고 본격적인 동네 살리기에 착수했다.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제외된 주거지였다. 대표적인 사업은 올해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이다. 2015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

되는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8차선인 종양대로 1.3km의 차도를 2차선 줄여 보도를 넓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김주필 주무관은 “이 일대에는 학교와 음악·미술학원들이 밀집돼 청소년 문화 거리의 적자라고 판단됐다”며 “지금은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있는 단계로 세계청소년예술축제, 청소년디자인학교 등의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인근 상인과 주민, 직장인들로 구성된 벤드가 주말마다 2·28 대구 학생의 거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후 2시 28분 28초에 자발적으로 공연에 나서는 등의 방법으로 이 같은 대구시의 방침에 환영하고 있다. 주민들과 1년간 만나 사업을 설명하며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주민대표들은 ‘주민참여 도시학교’에서 두 달 동안 교육까지 받았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주민대표’가 양성된 것이다.

대구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김창식 총괄팀장은 “장기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적 기업 형식이 바람직할 것 같지만 예상대로 수익이 보장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구는 이 외에도 고가도로를 들어서면서 쇠락한 남구 대명동 앞산지역에 ‘헬링먼거리 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역시 사업비는 100억원에, 차도 폭을 줄여 공간을 만들고 보도 정비, 전봇대 지중화, 건축물 입면 정비 등 시설사업과 동시에 주민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구 대명동에 자리한 도시민들기 지원센터는 대구 대의 강의실 1곳을 빌려 이들 사업들을 이끌고 있다. 7명의 연구원들이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글=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원센터 김영일 사무국장

“주민-지원센터-행정기관

끈끈한 유대가 추진 동력”

“주민들은 당연히 기대가 높습니다. 행정기관도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선호하는 것이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들 사이에서 비판적 협력자로서 설득하고 보여주고 관심 갖도록 하는 겁니다.”

대구시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김영일(41) 사무국장은 인터뷰 내내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다. 시민단체 출신인 그는 올 초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오전 7시 출근하고, 퇴근시간 없이 살고 있다.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막막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남구에만 재개발구역이 10여 곳에 달하지만 제대로 추진된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저쳐 있었죠.”



주민들은 모든 지역에서 그려하듯 속원사업을 바랐다. 도로나 공원 등이 생기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그 때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었던 때문이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2만 세대가 넘습니다. 외지업체들이 추진하는 재개발이 지역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고요.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이 시급했고, 주민들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설득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등 남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생사업들은 다 그의 일이다. 남구 내 거주하는 문화예술인 명단을 정리하고 주민들과 공모사업을 논의하며 시설사업은 물론 운영 프로그램, 수의 창출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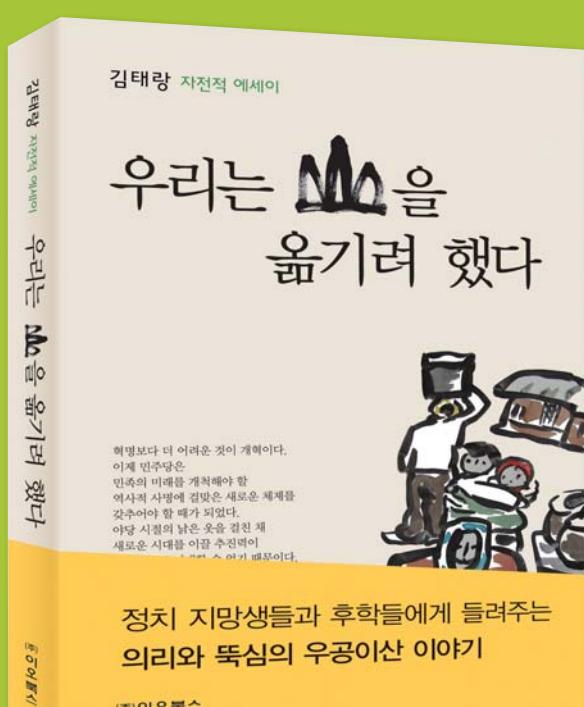
“관심을 이끌어내 관계를 만들고, 제안한 뒤 주민들의 반응을 기다려 반응이 오면 그에 따라 다시 논의를 시작합니다.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예요. 마음이 건강한 주민과 비판적 협력자, 행정기관의 삼박자가 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영남인으로 동교동계에서 40여 년간 DJ와 한길을 걸어온 외길 인생

민주당의 산 역사 김태랑 총장이 전하는 신의와 열정의 정치 담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역대 대통령들이 어렵게 내린 28가지 결정,
그 결정들은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토머스 J. 크라우프威尔, 에드워 키에스터 저음
엄지현 옮김 | 528쪽 | 18,000원

(주)이오북스 전화 02)3666-2525 www.eobooks.com

우리는 산을 옮기려 했다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온몸을 감고
휘도는 강력한 기를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걸어온 파란
만장한 일대기가 너무나 진솔하게
서술되어 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헌법학 교수

경남 창녕 출신, 부산수산대학 졸업
국립부경대학교 명예 경제학 박사
신민당 입당(1971년), 김대중총재 정치특보
제15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인사위원장, 국회사무총장 역임



출판기념회 일시 2011.12.1. (목)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